

# 홍콩, 대만정세의 변화와 일국양제의 위기

이 홍 규(동서대학교 국제학부, 교수)

작성일: 2014년 12월 14일

## ■ 홍콩의 우산혁명은 시위 발생 75일 만에 종료되었으나 홍콩 내 反중국 정서를 강화

- ‘우산혁명’으로 불린 홍콩 민주화 시위가 2014년 9월 22일부터 시작되어 12월 11일 홍콩 경찰의 시위캠프 철거로 종료
  - 이번 홍콩 민주화 시위는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된 것으로,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출의 완전한 직선을 바랬던 홍콩 주민의 여망과 달리 중국 당국은 행정장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된 후보 2-3명에 대한 주민 선거를 제시
  - 중국 당국의 입장 철회를 요구하며 대학생 동맹휴교와 홍콩 행정부 총부 및 도심 점령으로 시작된 홍콩의 민주운동은 점차 일반 시민의 호응을 얻었으며 경찰의 최루탄 사용을 우산으로 막아 ‘우산혁명’으로 호명됨.
  - 시위가 장기화되어 피로도 누적과 도시기능 마비로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지지도 하락 그리고 지도부 내의 균열 등으로 분위기가 퇴조하자 홍콩 경찰이 시위캠프를 철거

<표1>홍콩 우산혁명의 전개과정

시기	전개과정
2014. 6.10	중국 국무원, <홍콩특별행정구역에서의 일국양제 실천> 백서 발표: 홍콩 행정장관은 애국적이며 홍콩을 사랑하는(愛國愛港) 인사여야 하며 ‘일국’이 ‘양제’보다 더 중요한 전제라며 중앙의 홍콩 통치권을 강조
2014. 6.29	중국 당국의 백서에 항의하며 벌인 홍콩 행정장관 선출 방식에 대한 홍콩 시민 자체투표에서 민주적 보통선거 방안이 다수를 차지
2014. 7. 1	홍콩 반환 17년 기념일에 맞춰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쟁취운동 시위 발발 학생들은 향후 도심 점령운동 방식으로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기로 결정
2014. 8.31	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0차 회의에서 <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보통선거 문제 및 2016년 입법회 구성방법에 관한 결정> 통과: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-3명의 후보자를 놓고 선거하는 방식을 채택
2014. 9.22	대학생 조직과 고등학생 조직의 동맹휴교 발발로 홍콩 민주운동이 시작
2014. 9.28 ~ 12.10	홍콩 민주운동 시위대, 행정부 총부와 도심 지역을 점령하고 시위를 계속, 시간이 경과하면서 시위 분위기가 퇴조
2014.12.11	홍콩 경찰의 시위 캠프 철거로 우산혁명 시위는 자연히 종료, 그러나 시위대는 후일 복귀를 다짐

- 홍콩의 우산혁명은 홍콩 시민들의 反중국 정서를 더욱 확산시킨 사건
  - 집권자 령춘잉(梁振英) 홍콩 행정장관은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親중국계 인사로 홍콩 시민의 민주화 요구보다는 홍콩이 중국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홍콩시민의 퇴진 요구를 받아왔음.
  - 최근 매년 7월1일 홍콩의 중국 반환 기념일에 수십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벌여 온 민주화 요구 시위에서 反중국 정서가 계속 표출되어 왔고 이번 우산혁명은 이러한 시위가 처음으로 장기화되어 홍콩 시민들의 反중국 정서가 절정에 이른 사례

■ 대만의 지방선거에서도 국민당이 참패하고 민진당이 완승하며 反중국 여론이 강력 표출

- 11월29일 실시된 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이 민진당에 완패
  - 대만 지방선거의 꽃인 22석의 시장 및 현장 선거에서 국민당 6석, 민진당 13석, 무소속 3석을 차지
  - 특히 타이베이(臺北) 시장으로 민진당의 지원을 받은 무소속 커윈저(柯文哲) 후보가 57.1%의 득표율로 상대후보였던 국민당 렐성원(連勝文) 후보를 압도
  - 이밖에 타이중(臺中), 타오위안(桃園), 가오슝(高雄), 타이난(臺南) 등 주요 직할시 등 주요지역 8곳에서 親중국 성향의 국민당이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에게 완패
  - 다만, 시장 및 현장 선거를 제외한 하위 직급의 풀뿌리 선거에서는 아직 국민당이 민진당보다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민진당이 무소속 등과 결합할 경우 국민당이 수세
  - 국민당의 패배로 내치를 관장하던 장이화(江宜華) 행정원장은 즉각 사퇴했고 최고 책임자 마잉주(馬英九) 총통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국민당 주석직을 사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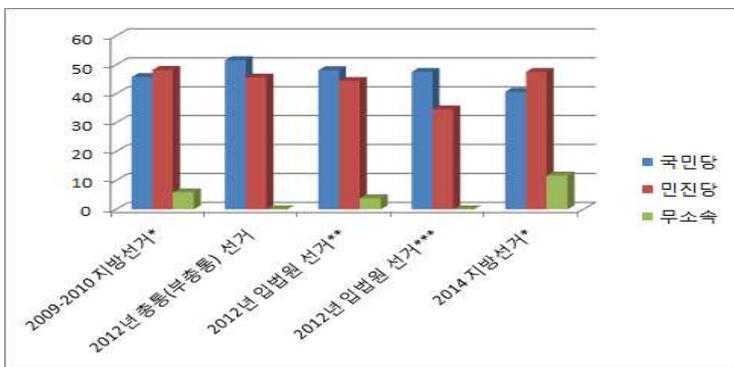
<표2> 2014 대만 지방선거 결과

급별		의석수	국민당	민진당	무소속	기타 정당
시장 및 현장	직할시장	6	1	4	1*	0
	현장, 현급 시장	16	5	9	2	0
시의원(직할시 포함), 현의원		907	386	291	203	27
향진(鄉鎮)장						
현 관할시(縣轄市) 시장 직할시 소속 구청장		204	80	54	68	2
향진(鄉鎮), 현 관할시(縣轄市) 직할시 소속 구의 주민대표		2141	539	194	1403	5

\* 타이베이(臺北)시 선거, 민진당 지원 무소속 후보

- 11월29일 대만 지방선거 결과는 과거 선거와 비교하면 민진당이 국민당의 득표율을 다시 추월하는 반전의 계기
  - 2009/2010년 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에 승리했던 민진당은 2012년 대선에서는 국민당에 패배하여 마잉주(馬英九) 2기 정권이 등장했고 이후 2012년 입법원 지역구와 전국구 선거에서도 국민당이 민진당에 승리
  - 2014년 대만 지방선거 결과는 아래 <그림3>에서 보듯 민진당의 득표율이 국민당을 거꾸로 크게 추월하는 양상, 특히 차기 총통 선거의 시금석이라 할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서 국민당이 민진당이 지원하는 무소속 후보에게 완패

<그림1> 대만의 기존선거와 2014 지방선거 득표율 비교



- \* 지방선거 득표율은 시장(직할시장) 및 현장 선거 득표율
- \*\* 입법원 지역구 선거/ \*\*\*입법원 전국구 선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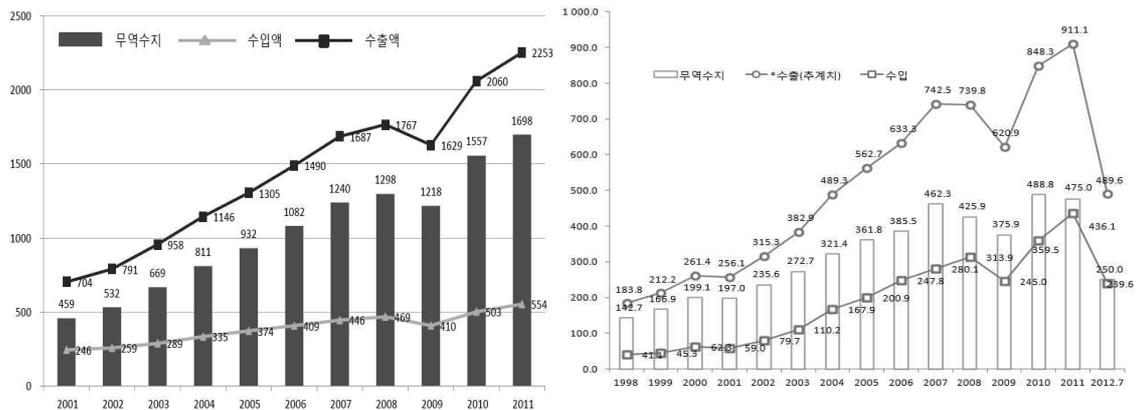
- 이번 대만 지방선거는 마잉주 정권의 親중국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로 그동안 심화된 대만인들의 反중국 정서를 반영
  - 親중국 성향의 국민당 마잉주총통 집권 2기에 反중국 시위가 격화되어 2014년 3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마잉주의 親중국 정책에 반대하는 대중 시위 ‘해바라기 혁명’이 발발
  - ‘해바라기 혁명’ 이후 대만 사회는 ‘대만 독립’ 여론이 주류가 되었고 국민당이 주창해온 중국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12% 수준으로 하락
  - 따라서 이번 대만 지방선거는 집권 국민당의 對중국 관계개선 심화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로 간주되어 왔음

■ **홍콩, 대만의 反중국 정서의 표출은 중국의 부상(崛起)하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오히려 ‘일국양제(一國兩制)’의 위기를 낳았음을 시사**

- 중국의 부상 하에서 홍콩과 대만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적 활력 회복을 도모

-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이후, 홍콩과 중국은 2003년 ‘경제긴밀화협정(이하 CEPA: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)’ 체결 이후 9차에 걸친 보충협정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옴
  - 2008년 집권 이래 대만 국민당 마잉주(馬英九) 총통은 親중국 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특히 2010년 중국-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(이하 ECFA: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)을 체결하고 2013년 6월 중국과의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중국-대만 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가속화
- 홍콩, 대만의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홍콩, 대만의 경제 활력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나, 한편으로는 홍콩과 대만 경제의 중국 종속화 현상을 야기
- 1990년대 말 주춤하던 홍콩-중국 간 교역은 CEPA 체결 이후 홍콩의 對중국 무역액과 무역수지가 급증하는 등 증가했고, 2007년 이후 하락세였던 대만-중국 간 교역 역시 2010년 ECFA 체결 이후 다시 증가하고 특히 對중국 무역액과 무역수지가 급증
  - 2003년 CEPA 체결 이후 홍콩의 GDP성장률은 2009년 세계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연평균 5%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 ECFA 체결 이후 대만의 GDP성장률은 1986년 이후 최고치인 10.7%를 기록하면서 ECFA가 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들이 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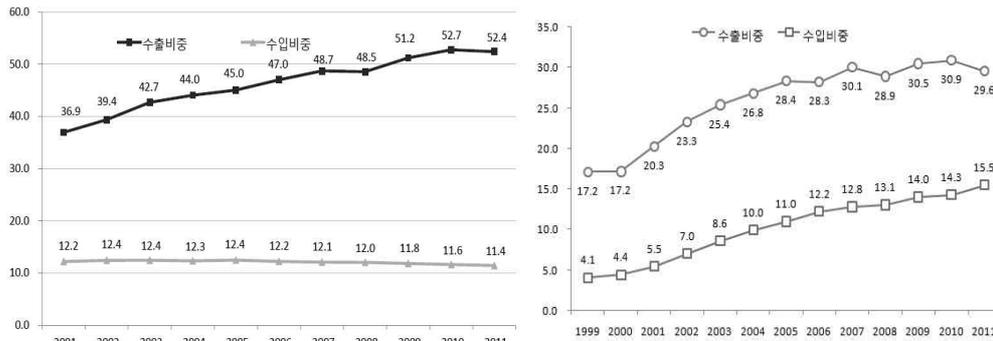
<그림2> CEPA와 ECFA 체결이후 홍콩과 대만의 對중국 교역 추세



<자료원> 양평섭 외, 중국·대만·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, (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) p53, p58

- CEPA와 ECFA 체결 이후 홍콩경제와 대만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짐.

<그림3>CEPA와 ECFA 체결 이후 홍콩과 대만의 對중국 교역 비중의 증가



<자료원> 양평섭 외, 중국·대만·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, (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) p54, p60

- 홍콩에서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협력이 강화되고 상호투자가 증진되었으나 홍콩 서민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 채 오히려 불안감만 가중시켰고 대만에도 그 불안감이 크게 확산
  - 중국 산모의 홍콩 원정 출산, 중국 보따리 상인들의 생필품 싸늘이, 중국인들의 홍콩 부동산 과열 투자로 부동산 가격 폭등, 홍콩 내 중국인 유학생 급증과 일자리 차지 등 서비스분야 경제협력이 그동안 중국인 유입 과다로 인한 홍콩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
  - 홍콩 사례를 통해 학습한 대만 정부는 2013년 양안 간 서비스무역협정에서는 인적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미지수로 서비스무역협정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 즉 ‘해바라기 혁명’도 야기

■ **홍콩, 대만 정세의 변화는 ‘일국양제’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시사하며 향후 한국 등 동아시아 각국에게도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체제가 가져올 문제점들을 시사**

- 중국의 부상 이후 중국 당국의 ‘일국양제’가 중국의 홍콩과 대만 지배의 명분으로 전략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흐름
  - 이번 홍콩의 우산혁명, 그리고 대만 지방선거에서의 국민당 참패는 중국경제로의 종속성이 커진 홍콩, 대만의 시민들이 느낀 ‘일국양제’ 체제의 실효성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한 것
  - ‘일국양제’에 대한 중국 당국의 권위주의적 입장이 철회되고 홍콩 행정장관 선거의 완전한 직선제 보장, 홍콩 및 대만 국내 고용 확대와 실업 감소 등 서민경제의 활성화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의 ‘일국양제’ 정책은 더욱 큰 저항에 봉착할 것임.

- 중국과 동아시아 각국 사이의 경제협력도 중장기적으로 反중국 정서를 확산시킬 것
  - 홍콩 사태는 중국과 동아시아 각국 사이의 경제협력이 심화된 국면에서 중국 당국이 무리한 외교적 요구의 수용을 동아시아 각국에게 압박할 경우 동아시아 각국이 어쩔 수 없이 묵인해야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
  - 중국과 동아시아 각국 사이의 경제협력 심화로 동아시아 경제의 중국 의존 및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동아시아 각국 경제가 공동화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계층을 중심으로 反중국 정서가 심화될 수 있음.
- 향후 홍콩, 대만 정세의 변화는 동아시아 질서의 안정을 훼손할 수 있음.
  - 홍콩, 대만 정세의 변화는 동아시아 각국의 反중국 정서 심화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에서 패권을 위해 부상하는 중국과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 및 일본 사이의 대립을 격화시킬 수 있는 사안

※ 참고자료

- 양평섭 외, <중국·대만·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>, (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)
- 장수영, “홍콩 반환 16주년, 깊어가는 반중정서” <KOTRA 해외시장정보> 2013. 7. 23
- 장윤미, “흔들리는 ‘일국양제(一國兩制)’: 홍콩 시위로 보는 중국의 미래” <INChinaBrief> Vol.280. 2014. 12. 8.
- 장정아, “홍콩, 민주주의를 배우기 시작했다” <한국일보> 2014. 10. 19.
- 刘锐绍, “香港占领运动取得两个重要成果” <BBC 中文网> 2014. 12. 11.
- “两岸和平发展应“去选举化””, <参政消息> 2014. 12. 2.
- “雨傘革命” <维基百科> (<http://zh.wikipedia.org/zh>).
- “2014年中華民國地方公職人員選舉” <维基百科> (<http://zh.wikipedia.org/zh>).
- “一名台湾学生对反服贸事件的观察”, <FT中文网> 2014. 4. 17.
- “岛内网上舆论快被“台独”攻陷”, <台海网> 2014. 5. 28.